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MNESTY
INTERNATIONAL



2013 년 8 월 8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귀하

공개 서한: 전시성폭력 방지를 위한 일본의 약속은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정의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정부와 총리께 1932 년부터 45 년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지체됨 없이 생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이행함으로써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립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정대협은 의장국인 영국의 선도 하에 2013 년 4 월 11 일 G8 외무장관회담에서 채택된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을 준수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전시 하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과 G8 국가들의 헌신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와 진실 그리고 완전한 배상을 실시 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G8 의 이러한 노력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언명한 선언과는 반대로 일본은 군대성노예제에 대한 완전한 책임 인정과 수용을 거부하고 정의, 진실, 배상을 향한 생존자들의 뜻과 노력에 반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고위관료들은 일본 제국군에 의한 성노예제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거나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951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과 다른 양자간 조약들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에 대한 책임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지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약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행위를 다루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개인배상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앞서 있었던 책임 인정이나 유감 표명과도 모순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5 월 유엔 고문철폐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제기된 관련 권고를 일본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문철폐위원회는 일본교과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고 2 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한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 시장의 발언 등 고위정부관료 및 지방관료들의 발언에도 깊은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아있는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은 이제 너무 고령입니다. 대다수는 정의, 진실 그리고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수용하고 생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의 고통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인 구제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 인정과 남아있는 생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실현을 통해 일본정부가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군대성노예제를 적절히 해결하기까지 G8 선언에 대한 지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외침에 응답함으로써, 일본은 이 선언이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증명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서한을 발송하고 일주일 후 공개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더 이상의 지연없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며, G8 선언의 약속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을 G8 회원국들과 다른 각국 정부에게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와카바야시 히데키
국제 앰네스티 일본
사무총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